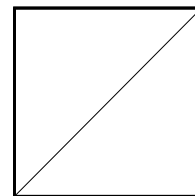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2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 차)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1. 의결주문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前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조치생략)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별표>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항, <별표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2020년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10.) 심의필
- 2023년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23.) 심의필

<별지>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한투자증권(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대표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 생략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생략사유 : “△△ ■■■■■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으로 기초치(20xx.xx.xx. 금융위)되었으므로 별도 조치 생략

2. 조치사유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 신한투자증권(주)는 TRS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TRS업무의 체계적인 업무절차 미마련

- ◇◇◇◇◇◇◇◇의 주 수익모델은 TRS업무이며, 동 업무가 ◇◇◇◇◇◇ 총수익의 xx%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 20xx년(xx.x%) → 20xx년(xx.x%) → 20xx년(xx.x%)

- 신한투자증권(주)는 TRS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처리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가 ■■■■■■■■와의 협의 및 승인절차 없이 ◇◇◇◇◇◇◇◇내 구두보고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② TRS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 신한투자증권(주)는 해외 재간접펀드의 기준가격 입력시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공식 기준가격(Official)* 이외 추정 기준가격 등의 임의입력(Un-official)**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 ◇◇◇◇◇◇◇ 담당자가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받은 증빙을 첨부하여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업무부가 승인

** 별도의 증빙 첨부나 승인절차 없이 바로 기준가격으로 인정

- 임의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가 20xx.x월~20xx.x월 기간 중 ○○○펀드의 기준가격을 임의입력하고 동 기준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TRS평가금액을 △△펀드에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하였음

③ TRS거래 관련 ■■■■■의 모니터링절차 미마련

- 신한투자증권(주)는 TRS업무와 관련한 리스크를 TRS 증거금률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 기초자산의 실질(특히 수익증권, 구조화지수 등) 및 기초자산의 비정상적인 변경 등을 ■■■■■가 적절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는 20xx.x.x. 前 ◇◇◇◇◇◇◇ ○○○○○ 팀장 ○○○이 △△ ▢▢▢▢펀드의 기초자산 변경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 변경사실을 안 이후에도 기초자산의 외형이 수익증권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수익증권의 명칭만 변경하고 거래발생경위, 거래의 내용, 수익증권의 특성 등을 검토·확인하지 않았음

* (변경전) 해외 ▢▢▢▢펀드의 수익증권 (변경후) LAMII 및 LAMIII의 수익증권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현황

구분	세 부 내 용
전산시스템	① TRS업무를 지원하는 적절한 전산시스템 미마련 ⇒ 주요 정보(평가액 산정, 거래정산 관리 등)를 담당자가 엑셀로 관리
내규 및 매뉴얼	② TRS거래 관련 체계적인 업무절차, 업무처리시 고려할 사항 등 미마련 ⇒ △△ ▢▢▢▢펀드의 1차 구조화 및 2차 구조화 관련 의사결정이 내부 검토절차 없이 ◇◇◇◇◇◇◇내 구두보고로 진행
기준가격 입력 통제	③ TRS 기초자산(해외 펀드)의 기준가격 입력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마련 ⇒ ○○○○펀드의 부실 은폐→△△ ▢▢▢▢펀드의 부실 은폐→신규 펀드 설정을 통한 투자자 피해 확대
모니터링 절차	④ TRS거래 관련 ■■■■■■의 모니터링절차 미마련 ⇒ 2차 구조화(현금거래 없는 기초자산 변경)와 같은 비일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미발견

(2)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 펀드상품 판매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는 ‘△△ NEW ▢▢▢▢ 9M 1호’ 등 3개 펀드에 대한 상품구조, 레버리지, 투자대상자산과의 만기 일치 여부 등을 검증·확인하지 않고 과거에 △△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 이로 인해 이미 부실이 발생한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신규 △△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음
-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사, 내재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상품선정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는 ▼▼ ◆◆◆◆ DLS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현지 시행사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적절히 검증·확인하지 않고 해외 운용사 및 DLS 발행사의 제안서 내용만을 근거로 상품 출시를 결정하였으며,

- 이로 인해 현지 시행사가 원리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인허가 및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에 시행사의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소개·판매되었음
- ② 블라인드 펀드 또는 시리즈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미마련
 - 판매 당시 투자대상이 결정되지 않거나 시리즈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당시 상품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신한투자증권(주)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 ◆◆◆◆ DLS 특정금전신탁이 판매 당시 설명과는 달리 현지 시행사가 투자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후순위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상당기간(x년 x개월) 판매를 지속하여 투자자 피해를 가중시켰음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현황

구분	세 부 내 용
상품출시	①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마련 ⇒ 내재위험 평가, 상품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심사절차 없이 상품출시 * 상품 출시 의사결정 전 해당상품의 특성, 위험요인 등을 검토·분석하는 절차가 없어 △△ ▢▢▢▢펀드 및 ◆◆◆◆ DLS의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판매가 이루어짐
사후관리	② 해외 대체자산 및 블라인드 펀드 등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절차 미마련 ⇒ x년 x개월간 시리즈 형태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였음에도 운용사의 운용보고서 외 실제 증빙 미확인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금융투자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892	02-3145-7040